



# 우리경제의 현 좌표와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下)

## 목 차

### I.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과 경제민주화

1. 고도성장을 위한 경제개발전략
2. 안전 바탕으로 건설해진 경제체질
3.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
4.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 II. 대외개방과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1. 수입자유화 배경
2. 한·미무역관계의 변화추이 전망
3. 주요한 한·미통상현안
4.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 III. 결 론

## II. 대외개방과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한편 대외문제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호전되던 해외경제 여건이 다시 퇴조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통상압력도 한층 거세어질 전망이다.

### 1. 대외개방과 자립경제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압력에 떠밀려 무리한 개방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우리 경제가 설 땅을 잃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생각처럼 개방정책이 외국의 압력에 못걸려서 강행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경제적 득실을 따져보고 우리 국익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다.

#### ① 수입자유화의 추진배경

그러면 왜 대외개방을 추진해 왔는가?

우선 국내시장이 좁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출지향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앞에서도 충분히 강조한바 있다.

이렇게 수출을 강조한 결과, 보통 개도국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개발초기에는 수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국



유 덕 상  
(경제기획원 사무관)



내산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장기간 국내산업을 보호해 주다 보면 독과점으로 인하여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품질향상이나 기술개발이 안되고 국제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다가 때마침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함께 몰아치는 보호무역주의 파고는 드세어지기만 하였다.

따라서 장기간 국내산업 보호로 인하여 약해진 대외경쟁력을 회복하고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일이 초미의 과제가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내외 경쟁을 자극하는 수입자유화 등 대외개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80년대초부터 수입자유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위스, 벨기에, 대만과 같은 나라는 뚜렷한 자원이 없고 국토가 좁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데, 이들은 일찌기 대외개방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잘 활용하고 소국경제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한 때문이다. 반면에 버마, 인도, 이집트 등은 자립경제를 강조한 나머지 교역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여 아직도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중공, 소련, 북한 등 공산권에서도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여 경제개방을 서두르고 있음은 좋은 교훈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이라 할 만큼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발전상을 과신해서도 아니

되며 과소평가해서도 아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세계 12대 교역국이며 자동차 생산만해도 세계 11위인 나라이다. 이런 처지에서 수입은 막고 수출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 ② 수입자유화의 속도

그렇더라도 개방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 수입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80년에 69%수준이던 수입자유화율을 87년까지 25% 높였을 따름이며, 이것을 이웃 일본이나 대만의 본격적인 수입자유화년대의 개방속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수입자유화속도는 오히려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입자유화 대상품목과 시기를 미리 확정·공고하여 국내업체가 사전대비할 시간여유를 갖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부작용 없는 개방정책이 추진가능 하였다.

### 〈自由化年代의 開放速度 比較〉

	한 국	대 만 <sup>1)</sup>	일 본 <sup>1)</sup>
• 기준년도	'80 : 68.6%	'70 : 57.1%	'60 : 41.0%
• 비교년도	'87 : 93.6%	'74 : 97.7%	'64 : 93.0%
• 개방속도	(7년) 25.0%	(4년) 40.6%	(4년) 52.0%

주 : 1) 87년 현재 수입자유화율 : 대만 97%, 일본 98%수준

## 2. 한·미 무역관계의 변화추이와 전망

한·미 무역마찰은 왜 생기는가?

우선 우리의 대미수출품목이 최근 노동집약상품에서 자본집약상품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한국상품이 미국인의 눈에 잘 띄게 되었다는 점이다. 86년은 우리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 첫 해인데도 이미 20만대나 수출하였으니 미국인들이 어찌 경계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미국에서 다섯번째 무역흑자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82년 이후 대외흑자가 매년 증가하여 86년 대외무역흑자는 73억불이나 되었으며, 금년 7월까지 이미 54억불로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흑자가 늘어나자 우리보고 시장개방을 하라느니 환율절상을 하라느니 해서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다가 미국경제가 본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수그러들지 않으리라고 본다. 1,700억불의 무역적자, 2,200억불의 재정적자로 세계최대의 순채무국이 되다보니 미국의 여론은 대외통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시장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미무역마찰을 극대화 하는 것이 수출증대의 지름길이요, 성장과 고용증대

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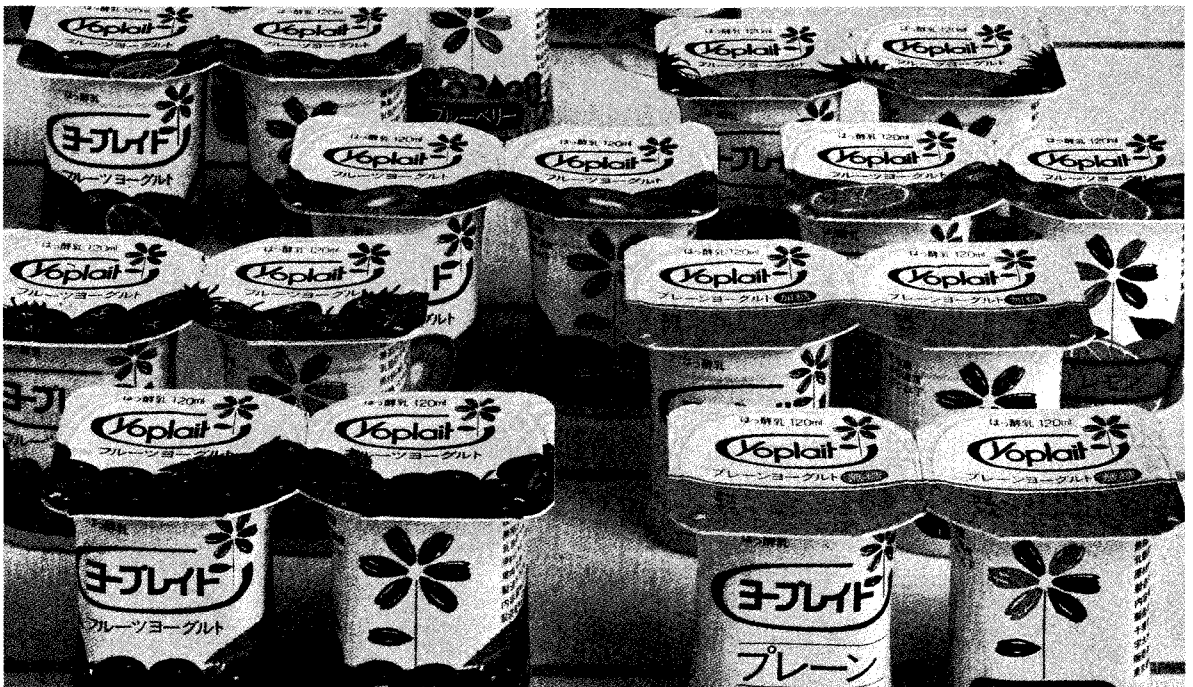
## 3. 주요 한·미 통상현안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대만, 일본 등 우리의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비교적 대미통상마찰이 없이 평온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우리가 그동안 대미흑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는 우리의 대외흑자폭이 이미 50억불을 넘기면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이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요청하는 것은 시장개방과 관세인하, 그리고 환율의 평가절상으로 요약된다.

### ① 시장개방과 관세인하

우선 미국산 담배수입을 보면 87.9월부터 우리나라 담배시장의 1%를 수입허용하였으나, 가격제한, 높은 관세 및 판매소 제한 등 시판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따라서 최근에 이러한 제한을 다소 완화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양담배수입은 일본이 30년전, 대만이 20년전에 이미 개방하였거니와, 중공도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 담배시장을 1% 개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담배수출



액 1,000만불을 상회하는 1,500만불이고 이로 인하여 국내 영업초 경작농가의 소득은 약 15억원이 줄어들 것이다.

다음 쇠고기,오렌지, 포도주등 농산물과 컴퓨터 등 공산품의 수입개방인데, 정부는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서 개방시기를 미루면서 공산품 개방을 응해주고 있다. 일례로 87.7월부터 1년간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서도 미국관심품목중 농업물은 유스류 2개품목만 추가개방하고 대신 공산품을 8개나 추가개방해 주었다.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론하기로 하겠다.

또한 미국이 작년 5월이후 관세인상을 요청해 온것이 291개 품목인데, 이 가운데 금년 6월까지 157개 품목의 관세를 5~30% 추가인하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② 환 율

그리고 미국은 원화의 대미환율을 평가절상하라고 요구해 오고 있다. 「평가절상」이란 1달러당 890원까지 올랐던 환율을 805원으로 낮추는 것처럼 원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1달러어치를 수출하면 종전에 890원을 벌던 것을 805원밖에 못벌어 수출마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출가격을 1달러 11센트로 올려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수출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1달러어치를 수입해서 종전에 890원 벌던 것을 805만원 받아도 되기 때문에 대미흑자국 중에서는 국내가격이 떨어져 수입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미흑자국에서는 환율절상폭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 대만 등 다른 흑자국만큼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게 미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환율은 비단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물가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다만 우리 경쟁상대국의 질상속도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 4.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사람도 농축산물의 개방만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만큼 농축산물수입은 경제외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도 가급적이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개방을 미룰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 ①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의 추진배경

우선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이 좁고 가격도 비싸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세계평균의 1/21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농축산물을 자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생산을 하더라도 가격이 국제가격의 3.7~3.8배나 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	세계평균
· 1인당 경지면적(평)	165	3,500
· 쌀 생산가격(배수)	100	380
· 쇠고기	100	370

다음으로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구조가 고급화·다양화 해가고 있다. 즉 쌀중심의 소비구조가 고기 및 가공식품 등 고가품위주의 소비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생산이 안되던 품목이나 질이 좋은 수입품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도 수입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육구는 강력한데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제한이 심한 편이라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농축산물 수출국이다. 그래서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수입에대해서 대부분 수입물량을 제한하거나 특별법에 의한 엄격한 절차와 높은 관세장벽이 있어서 수출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과도한 수입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②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현황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는 83년부터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농축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를테면 87년에 전체 수입자유화율은 93.%인데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72.2%에 불과하다. 그것도 양곡관리법, 사료관리법, 축산법 등 특별법에 의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

분이다. 뿐만 아니라 88년 이후의 전체 수입자유화율은 95.3%로써 370개 품목만 개방을 하지 않는데, 이기운데 132개가 농축산물이다.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현황〉

	83	84	85	86	87	88	유보
• 수입자유화율(%)							
전 체	80.4	84.8	87.7	91.5	93.6	95.3	
농축산물		68.3	69.7	71.1	72.2	73.1	
• 품 목 수(개)							
전 체	305	357	233	300	167	133	370
농축산물	19	8	7	7	8	5	132

몇가지 대표적 품목을 보자.

호텔용 쇠고기의 경우 85.5월부터 국내 소값폭락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국제무역관계 협정(GATT)에 위반이라고 하면서 전체 쇠고기소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인 만큼 수입을 재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수입재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가금류의 경우 83년에 종계이외의 닭과 가금의 비계, 84년에 종계, 86년에 칠면조고기 등 가금류의 고기와 가금류의 설육, 그리고 87년에는 가금류고기통조림이 개방되었다. 물론 가금류를 수입하여 국내업체가 다소 타격을 입었을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이 국산품을 압도할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포도주라든지 배합사료용 건조의 일종인 알팔파같이 어차피 개방해야 되고 국내업체에 미칠 영향이 작은 것부터 금년에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③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의 정책방향

이제는 단순히 농업소득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쌀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자급상태 또는 생산과잉 상태인 관계로 증산하더라도 처분이 곤란하여 실제로 소득증가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더구나 국내농산물가격은 쌀의 경우 국제가격의 3.8배, 쇠고기의 경우 3.7배나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격지지나 수입억제에도 스스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부담없이 노동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업화」가 불가피하다. 86년 3월

농어촌공업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67여개 농공지구에 580여개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91년까지 농공지구는 180개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40만명 이상의 농어촌 주민에게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농가소득 기반을 바탕으로 농가소득에 커다란 타격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인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는 불가피한 추세이다. 그러나 협상공종에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 농가소득과 농어촌개발이 갖는 경제외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농업여건과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꾸준히 설득하여 최대한 국익을 보전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미흑자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통상의 교로 모든 문제를 타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우리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도 나라경제에 큰 실익이 되지 않는 것은 우선 당장 관련업체의 이름이 있더라도 언젠가 개방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Ⅲ. 결 론

다가오는 21세기는 태평양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전세계 국민총생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에 거의 곱절이나 높아질 정도로 유달리 성장력이 강력한 지역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 유망한 신흥공업국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다른나라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배우려는 열성이 대단하기 때문이요, 방대한 미국시장은 물론 이웃 일본과 중공시장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의 능력을 상용하는 대외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통상마찰의 예봉을 피하면서 무역강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마다 다소의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으나, 긴 안목으로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자제와 인내를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희태**